CPb.e.2r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자료 (2)

1.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촉구
2.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
3.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4. 성명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약속을 환영하며
5. 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농성 돌입
6.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 법률안; 유선호의원회 발의, 1998.12
7.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8. 열사범추위 대표자회의 소집공고
9. 성명서;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 100일을 맞이하며
10.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간보고대회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설명회
11. 성명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즉각 나서라
12. 성명서;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기구에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1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간담회;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1999. 5.14
14. 유가협천막농성 1주년맞이 기자회견 및 특별법제정 결의대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번호
98 3/11 | BR-2 | 40

- 더 이상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하여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15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 참석인사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공약화 요구내용 설명
■ 질의응답

1997. 10. 1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더 이상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하여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15대 대통령선거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문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은 사심없는 조국 사랑의 정신, 민족 사랑의 정신이다. 그러하기에 유가협과 연대회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위업을 계승하고 이를 부정해온 독재정권과 맞서 지금껏 싸워 왔다.

제1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는 세 차례에 걸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하여 각 당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촉구한다.

제15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이유는 제 15대 대통령 재임 기간이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시기는 나라와 민족이 번영된 미래를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쇠락의 길로 가느냐의 중차대한 향방을 가늠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이루고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올바른 과거청산으로부터 출발한다. 법과 제도에서, 인물에서, 독재정권과의 단절을 이루어내고 정부차원에서 수많은 인권피해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독재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삶을 국민들에게 한치의 왜곡됨 없이 자리잡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때 적지 않은 기대를 해 보았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기에 저질러진 각종조작사건들(공안사건)이 재평가되기는 커녕, 당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 진상규명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열사·희생자들이 늘어갔을 뿐이다. 김영삼 정권의 집권 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 지금, 현 정권이 문민정권이라고는 하지만 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 군사독재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민정권 2기에 들어서게 된다.
2기 문민정권은 스스로 보수세력과 결탁하고 추잡한 부정부패의 주범이 되어 민주화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선 1기 의사 문민정권인 김영삼 정권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따라서 15대 대통령 선거를 이 땅에 참된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세력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을 각 당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한다.

2. 독재정권 치하에서 진행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재심한다.

3. 열사·희생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지정한다.

4. 국가기념일을 제정한다.

5. 열사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화한다.

6.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기념관(열사의 전당)과 민주화운동 박물관을 설립 한다.

7. 열사·희생자들의 의로운 행적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이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명명한다.

1997. 10. 14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상임의장 박정기, 공동의장 배은심, 강민조, 허영춘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상임의장 이창복, 공동의장 권영길, 문정현, 박순보, 양재덕, 정진동, 진관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유가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한울삶 (우)110-542 (전화)764-1684 (팩스) 743-2830
연대회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131-106 (우)110-542 (전화)742-3180 (팩스) 742-3181

문서번호 : 명예회복 971014-1

수신 :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 공약화 요청 서한

1. 21세기의 희망찬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철주야 땀흘리고 계실 귀 당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한 이래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분신, 할복, 투신의 방법으로 산화한 사람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3.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는 각 열사·희생자의 추모(기념) 단체들이 모여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4. 현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의 명예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를 받아들여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5.18 광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피로 물든 한국 현대사, 왜곡되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정권하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시대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했던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희망찬 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재정권의 폭압하에 철저히 은폐되고 조작되어 온 각종 인권피해사실을 반드시 진실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규명만이 '국민대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형을 살고 있고 그들이 집권할 당

시 헌법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수행한 저항은 '정당행위'라는 판결(97.9.3.부산지법 형사2부)이 내려진 상황에서 독재정권하의 의문회생자 등 각종 인권피해자들, 독재정권에 항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날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를 올바로 잡아내기 위해서 더할 나 위없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5. 그러하기에 독재치하에서 빚어진 의문회생자들의 사인규명, 각종 인권피해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진실규명, 민주화 과정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귀 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고 답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상임의장 박 정 기
공동의장 배은심, 강민조, 허영춘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상임의장 이 창 복
공동의장 권영길, 문정현, 박순보, 양재덕, 정진동, 진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 공약화 요청

◇ 배경

전국민족민주열사·회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97년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민족민주열사·회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를 하였다. 이러한 학술회의를 하게 된 목적은 지금까지 감성적으로만 접근되어 왔던 민족민주열사·회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여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여 정치적으로 요구하고자 함이다.

학술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은 아래와 같다.

곽노현(방송대교수, 법학),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삼웅(정치평론가,친일문제연구회 회장), 김선수(변호사), 김순태(방송대교수, 법학), 김지형(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 연구위원), 박래군(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회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배동인(강원대교수, 사회학), 손석춘(한겨레'미디어' 팀장), 손호철(서강대교수, 정치학), 양재덕(전국민족민주열사·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이윤성(서울대교수, 법의학), 이창복(전국민족민주열사·회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임재경(언론인),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장임원(중앙대교수, 예방의학), 정병호(사월혁명연구소 사회분과위원장),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천정배(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허영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공동의장), 황상익(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회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황인성(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집위원장) 이상 25인. (가나다순)

우리는 세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민족민주열사·회생자 명예회복 방안을 정리하여 각당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다음 -

◇ 취지

박정희 정권이래 91분의 열사들이 분신 등으로 자결하였고, 16분이 타살되었다. 그리고 옥중에서 85분이 산화하였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이 43분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사고나 병으로 운명한 분들이 87명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만 한한다.

한국현대사에서 분신, 할복, 투신 자결은 독재권력의 폭압성에 대한 가장 치열한 항거였고, 고문사, 기타 정치적 타살은 독재권력의 폭압성을 온 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었다. 독재정권의 학정과 부패에 항거한 자결, 그리고 그들에 의한 타살은 언제나 크건 작건 독재정권의 균열과 위기를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민주화운동 역시 그런 죽음을 계기로 고양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국가차원의 아무런 추모나 예우가 없는 실정이다. 시위를 진압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전경은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만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민주헌정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다 운명한 열사들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17년이 되었지만 박정권에 저항하다 산화한 열사들의 명예회복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진 바 없다.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시민을 총칼로 살육하고 집권한 이래 수 많은 열사들이 폭정에 항의하여 몸을 불살랐지만 전두환·노태우가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사들의 명예회복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시행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올바른 과거청산은 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용두사미 격으로 자취를 감춘지 이미 오래다. 나아가 김영삼 정권에서도 분신 항거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 올바른 과거청산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과 아울러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를 앞다투어 사면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이들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열사들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들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없다.

제15대 대통령의 임기는 1900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

열사들의 피로 얼룩진 20세기를 올바로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희망과 발전, 통일된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출범하여야 한다. 이 정부는 20세기 하반기에 일어난 열사들의 죽음을 비롯한 모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을 하여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약화 촉구 내용

1.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한다.

의문의 죽음이 갖는 심각성은 그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 권리인 생명권의 침해에 관한 사건이며, 정치적 폭거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살되지는 말아야 한다. 정치적 반대자가 피살될 수 있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이다. 우리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그것의 진실을 밝히고야 만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살해 의혹이 있는 경우 권력의 고하를 불문하고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내고야 만다는 전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악습은 지속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적 능력과 강제 조사권을 가진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

2. 독재정권 치하에서 진행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재심한다.

과거 독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수 많은 민주인사들을 구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요구대로 맞추기 위해 고문은 일반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사법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들 공안사건의 사법적 재심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도 정권 유지를 위해 양심수가 양산되는 것을 봉쇄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3. 열사·희생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지정한다.

민관합동으로 '진실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자를 정하고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실시하여 열사·희생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유가족에게 연금 지급과 같은 국가유공자급의 혜택을 부여한다.

4. 국가기념일을 제정한다.

열사·희생자들을 국가적으로 추모·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을 기존의 현충일과 다른 날로 제정한다.

5. 열사 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화한다.

현재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양산 솥발산 민주열사묘역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묘소를 모아 국립묘지로 승격화시키고 성역화 한다.

6.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기념관(열사의 전당)과 민주화운동 박물관을 설립 한다.

열사들의 공적과,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후세에 전하는 일은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다.

7. 열사·희생자들의 의로운 행적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이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명명한다.

위 5와 같은 취지에서 열사들의 고귀한 뜻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기리도록 한다.

◇ 위 내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조치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특별법 제정

과거 독재시대의 국가 폭력이나 국가 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을 진척시키기 위해 진상규명, 형사처벌, 민사배상 등에 걸림돌이 되는 민형사시효제도에 대한 예외 규정과 민관합동'진실위원회'와 특별검사제 등 특별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한다.

민관합동'진실위원회'는 총체적, 역사적 차원의 시대 인식과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기구이다. 진실위원회는 법조인, 정치학자, 역사학자, 민주화운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 추천권은 정부와 정당, 그리고 민주화운동세력 등 당사자들이 한다.

- 이상 -

[첨부 자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단

옥중회생자 제외

70년 전태일
71년 김진수
75년 김상진
79년 김경숙
80년 김의기 김종태
81년 김태훈 최종철
82년 기종도 박관현
83년 황정하
84년 박종만
85년 홍기일 송광영 기 혁
86년 박영진 변형진 강상철 오한섭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이경환 진성일
87년 박종철 박선영 장재완 이한열 박태영 이석규
황보영국 이석구 박응수 이대용 유인식
이순덕 김현욱 박용선 표정두 이재용 채광석
88년 이대건 김장수 최윤범 장용훈 성완회 이문철
송철순 문송면 김길호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양영진 유병진 신영일 정성규
89년 김윤기 김종수 이상남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종하 조정식 남태현 이재식
정상률
90년 최태욱 이영일 최 동 박성호 원태조 강민호
김병구 김상원 오원석 신용길 정성묵 김수경
심광보 김기훈 이원기 김병곤 조영래 최응현
신장호
91년 석광수 권미경 김처칠 윤용하 정상순 이진희
유재관 이정순 김봉환 신용길 배주영 이광웅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손석용 김기설 이정순 정상순 고재욱 류정하
양용찬
92년 금진현 박복실 강희수 오원석 임희진 박현민
이상렬 윤재영 김선호 오원진 문승필
93년 서영호 김주리 고정자 박미경 조경천 임혜란
채회돈 최완용 정영상 정영부 최 웅 김영자
이경동 한상용 성순회 황인철
94년 김상옥 최성묵 김낙성 엄익돈 윤양덕 김순복
손구용 이창환 신건수 이범영 문익환 이오순
김남주
95년 양봉수 박삼훈 조수원 서전근 장현구 최정환
박현채 이형기
96년 김시자 유구영 김왕찬 박문곤 오용철 진철원
노수석 권회정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97년 한상근 민병일 홍장길 박순덕 김준배

의문의 죽음

73년 최종길
75년 장준하
78년 정법영
80년 임기윤
82년 정성희 문영수
83년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한회철 허원근
85년 우종원 장이기
86년 신호수 김성수
87년 김용권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박상구 이이동
이태춘 최우혁 정연관 정경식
88년 오범근 고정회 우인수 박종근 배중손 문용섭
89년 이철규 이내창 이재호
90년 김용갑 박성은
91년 남현진 송종호 김영환 박창수 길왕식
95년 이덕인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B12-5 67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

일시 : 1998년 8월 3일 오전 10시

장소 : 향린교회

▣ 회 순

1. 개회선언
1. 민중의례
1. 참여 단체와 인사 소개
1. 임시의장 선출
1. 취지 및 경과 보고
1. 구성과 체계 확정
1. 운영 내규 확정
1. 공동대표, 상임대표, 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등 위촉과 선임
1. 사업 대강 확정
1. 결성 선언문 채택
1. 폐회 선언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 취지와 목적.

민족민주 열사·희생자들은 지난 시기 외세와 독재, 그리고 악덕기업주에 대항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간 해방, 노동해방을 위해 민족민주운동의 최정점에서 투쟁하다가 장렬히 운명하였다. 민족민주 열사·희생자들의 죽음은 많은 애국적인 국민들을 투쟁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외세와 독재, 자본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다 주었다.
우리 민중의 역사는 이처럼 열사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항거한 결과 점차 밝은 내일을 안아오고 있다.

-.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는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을 4000만 국민과 함께 진행시키고자 함입니다.

-.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는 당면한 목표인 특별법 제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 사회·민주 단체들의 조직적 힘을 모아낸다.

-.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는 과거 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폭압 기구(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를 국민을 위한 기구로 개편해 내고 악법(국가보안법, 집시법,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 개폐사업을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으로 전개한다.

-.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행사를 범국민 차원에서 치러낸다.

-.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는 상시적으로 열사·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전에 추진중이었던 범국민추모사업회를 건설하여 조직적 전화를 한다.

경과보고

-. 1988년, 1989년에 걸쳐 135일 동안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협 회원들 농성.

-. 1993년 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장 문익환.

-. 1994년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10여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 함.

-. 1996년 9월 추모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제1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선포함.

-. 1997년 9월 제2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에 범국민추모사업회 발기인 모집 500여명 가입.

-. 1998년 4월부터 전국연합, 민주노총 주최,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서울역 등지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켐페인 진행 중.

-. 6월 18일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 및 간부들과 유가협, 추모사업 연대회의 간담회 개최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제정, 범국민 추모사업을 위한 범추위 결성과 관련 사업을 전국연합 명의로 제 민주, 사회단체에 제안하고, 켐페인 등의 사업을 보다 힘있게 진행할 것을 합의 함.

-. 6월 25일 전국연합 주요 회의를 통해 산하단체에서 매주 1회씩 돌아가며 서울역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유가협, 추모단체 연대회의와 역할 분담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옴.

-. 7월 14일 세실레스토랑에서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를 결성하기 위한 제 단체 초청 설명회 개최.

-. 7월 2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7월 24일 오후 2시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 결성을 위한 제단체 초청 간담회를 조계사에서 22개 단체와 개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준비위를 발족하고 범추위를 결성하기로 합의함.

참여 단체

전국연합, 서울연합,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 경기남부연합,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빈련, 민변,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불교인권위, 경실련, 참여연대, 한청협, 한노협, 한총련,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교조,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사월혁명회, NCC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개인 : 신인령, 안학섭

체계와 구성

추진위원 :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동의하는 제 사회 민주 단체의 회원들과 명망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이 사업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한다.

공동대표 :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참가하는 각 단체의 대표자와 사회 각계의 저명 인사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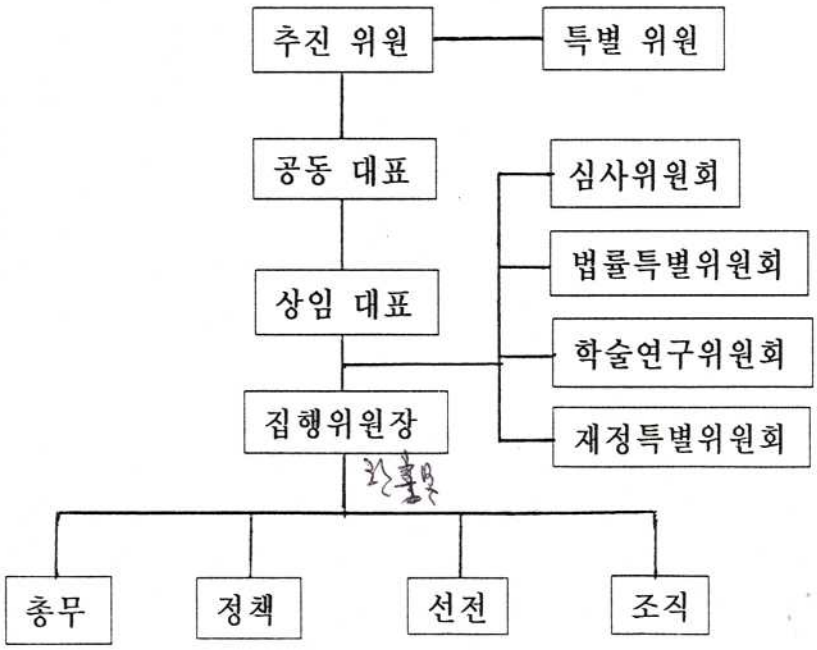
상임대표 : 대표성을 가지는 인사들과 각 종교를 대표하는 분들로 위촉한다.
현재까지 상임대표로 위촉되신 분들 : 문정현 신부, 김상근 목사, 김현 종무원장, 청화스님, 이창복의장

재정특별위원회 :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재정을 책임지며 재정사업에 관한 전반을 다룬다.

법률특별위원회 : 민변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안을 다룬다.

학술연구위원회 : 열사와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심사위원회 : 지금까지 열사·회생자로 통칭되어 온 호칭을 '열사', '지사', '투사' 등의 형태로 호칭상의 구분을 한다.



유가협.
Tel: 76k-168k

사업 대강 및 일정

-. 매주 금요일 12시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항의방문
17시부터 19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 진행

-. 서명운동과 서명자 1인 광고기금(1000원) 모금운동, 엽서보내기 운동

-. 범국민추모사업회 발기인 겸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모집.

-. 8월 초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행사위원회 구성.

-. 9월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98년 제2차 학술회의에서 특별법 법안 발표

-. 9월 7일 경 특별법 법안 공청회

-. 8월 하순이나 9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사·희생자로 통칭된 호칭을 열사, 지사, 투사 등의 형태로 호칭 구분.

-. 9월 10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의원 입법 추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특별법 제정시까지 유가협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 9월 14일-20일 제3차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행사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사의 거리' 선포 등의 행사 진행.

-. 9월 14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사업회준비위로 조직적 전화.
제3차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

-. 9월 19일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선언문

오늘 우리는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하신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루어 내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진실한 국민화합과 열사들이 염원했던 참민주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명예회복 진상규명 법추위~~) 결성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현대사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에 맞서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개척해 온 역사이었으며,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분단 독재에 맞서 민주를 쟁취하고,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이어 통일을 이루고자 한 민족통일 민주운동의 역사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와 기층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지향해 온 정의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민중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폭압에 짓눌리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이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들풀처럼 다시 일어나 압제에 맞서 항거하였으며, 조국의 밝은 내일을 개척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이 가운데에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참민주를 열망하며 자신의 한몸을 기꺼이 민주와 통일의 제단에 바친 수많은 열사들의 아름다운 삶과, 정신은 우리 민족사의 정수이자,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좌표가 되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최대과업이었던 민주화와 분단극복을 위해 장렬하게 운명하신 331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 이 분들의 삶은 백두대간의 봉우리와도 같이 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불과 1년 여 앞둔 지금까지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분들의 숭고한 지향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우리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통해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잡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의 길을 여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각계각층이 이 운동에 함께 나서도록 할 것이다.

명예회복 진상규명 범추위는 우선하여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과 열사정신 계승의 단초를 열어 갈 것이다. 아울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범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나아가 작고하신 고 문익환 목사님이 추진하였던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사업회를 완성시켜 한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 참민주와 통일의 시대정신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998년 8월 3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약

제1조(명칭)

본조직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 열사범추위)'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직은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하여 특별법제정 사업을 전개하고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등 추모사업과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3조(구성원칙)

본조직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을 폭넓게 망라하여 구성한다.

제4조(추진위원대회)

1) 추진위원은 각계에서 추천하는 단체추천인사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2) 정기추진위원대회는 매년 1회 상임대표자회의에서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제5조(대표자회의)

1) 구성은 참가단체 대표와 대표자회의의 추인을 받은 개인으로 구성한다.

2) 본조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의결을 한다.

제6조(상임대표)

1) 상임대표는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2) 상임대표는 본조직의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다.

제7조(감사)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고문, 자문위원)

본조직의 사업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위해 각계 원로와 지도자, 전문가를 상임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본조직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재정특별위원회, 특별법제정위원회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상임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집행위원회)

1) 대표자회의와 상임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본부의 부서 책임자로 구성한다.

3) 집행부서는 총무, 정책기획, 조직, 홍보, 문예, 대외협력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본조직의 각종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할 수 있다. 단 규약의 개정은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재정)

수입은 단체분담금과 추진위원회비 및 재정사업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3조(일반원칙의 준용)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4조(부칙)

1) 본조직에 참여하는 추진위원은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사업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2) 규약은 본조직의 결성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1998년 8월 3일

인권 자료실
등록일 | 분류기호 | 번호
B12-5 61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약칭 열사범추위)
우)136-034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2 백호빌딩 4층 (전화) 02-921-4090 (팩스) 02-921-4094
문의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김학철 (전화)742-3180 (팩스)742-3181

문서번호 : 명예회복 9809015-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보 도 자 료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

1. 언론 정달을 위해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9월 15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열사범추위 의장 이창복, 이해동 목사, 진관스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은심 회장, 박정기 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김학철 기획국장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창복 의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길재 의원의 소개의견서 낭독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특별법안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소개의원 명단을 받아 청원 접수합니다.

5.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의 자료에 첨부합니다 .

6. 아무쪼록 귀 언론사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 -

1998. 9. 15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약칭 열사범추위)
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청화, 김현, 이해동

- 첨부자료 1-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박정희 정권이래 93분의 민족민주인사들이 분신 등으로 자결하였고, 18분이 타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이 42분에 이르고 있으며 사법 살인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사고나 병으로 운명한 분들이 73명에 이릅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분신, 할복, 투신 자결은 독재권력에 대한 가장 치열한 항거였고, 고문사, 기타 정치적 타살은 독재권력의 폭압성을 온 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학정과 부패, 악덕 기업주에 항거한 자결, 그리고 그들에 의한 타살은 언제나 크건 작건 독재정권의 균열과 위기를 초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민족민주운동 역시 그런 죽음을 계기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진압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전경은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만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민주헌정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다 운명한 민족민주인사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추모 사업도 없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지 19년이 되었지만 박정권에 저항하다 운명한 민족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은 이후의 어느 정권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바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시민을 총칼로 살육하고 집권한 이래 수많은 민족민주인사들이 폭정에 항의하여 몸을 불사르기도 하였고 그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였지만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 의해 범법자로 낙인찍혀 있는 민족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이 일부 시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처벌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과거청산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년 여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인사들의 피로 얼룩진 20세기를 올바로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희망과 발전, 통일된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에 자주, 민주, 통일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장정을 함께 걸어온 과정에서 운명하신 민족민주인사들을 우리 역사에 자랑 차게 기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차례에 걸친 학술회의 참가자들과 열사범추위 상임대표들은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각 당에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 35인의 소개와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명부 1차분(52,898명)을 첨부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1998년 9월 15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참가자

강만길(고려대교수, 한국사) 외 35인.

- 강정구(동국대, 사회학), 곽노현(방송대교수, 법학),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삼웅(친일문제연구회 회장, 서울신문 주필), 김선수(변호사), 김순태(방송대교수, 법학), 김지형(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 연구위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배동인(강원대교수, 사회학), 손석춘(언노련 위원장), 손호철(서강대교수, 정치학), 안병욱(가톨릭대교수, 국사학), 양재덕(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윤기원(변호사), 이미경(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훈(변호사), 이윤성(서울대교수, 법의학), 이창복(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이창수(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임재경(언론인),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장임원(중앙대교수, 예방의학), 정병호(사월혁명연구소 사회분과위원장),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정태상(변호사), 조용환(변호사), 천정배(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한충목(열사범추위 집행위원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황상익(서울대교수, 의사학), 황인성(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집위원장 역임).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열사범추위)

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청화, 김현, 이해동

- 가극단 금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마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타,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소개의원 : 이길재 (국민회의) 외 58인

- 강삼재, 강현욱, 권오을, 권철현, 김근태, 김동주, 김명윤, 김문수, 김민석, 김성곤, 김수한,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원길, 김종배, 김충조, 김홍신, 김홍일, 노무현, 박광태, 박종웅, 방용석, 서 훈, 설 훈, 신기남, 유선호, 유재건, 이규정, 이기문, 이미경, 이부영, 이상수, 이성재, 이수인, 이신범, 이영일, 이우재, 이원복, 이재오, 임채정, 장영달, 장성원, 정동영, 정동채, 정한용, 정호선, 제정구, 조성준, 조순승, 조한천, 조홍규, 천정배, 추미애, 한영애, 한화갑, 황학수)

- 첨부자료 2 -

청원서 요약

제목 :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원

취지

우리 현대사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에 맞서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개척해 온 역사였으며,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분단 독재에 맞서 민주를 쟁취하고,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이어 통일을 이루고자 한 민족통일 민주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노동자와 기층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한 정의의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대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폭압에 짓눌리기도 하였으며 칠흙 같은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들불처럼 다시 일어나 압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분연히 일어 섰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참 민주를 열망하며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민주와 통일의 제단에 바친 수 많은 유공자들의 아름다운 삶과, 정신은 우리 민족사의 정수이자,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불과 1년 여 앞둔 지금까지도 민족민주유공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다시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 희망의 세기, 화합의 세기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민족민주유공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견을 떠나, 여야의 구분 없이 살아 남은 자의 의무로써,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과 '의문의죽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 가칭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 음 -

1) 과거 민족 민주운동 과정에서 운명한 이후 아직까지 독재 정권이 씌워 놓은 범법자의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2) 과거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조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건에 대한 특별 재심.

3) 민족민주유공자들에 대 국가차원에서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준하는 예우.

4) 민족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5) 국가 차원의 추모 및 기념 사업.
- 국가 기념일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공식 행사.
- 유공자묘역을 한데 모아 성역화
- 유공자의 전당 설치
- 유공자들의 행적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유공자의 거리 명명.
-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추서.

6) 민간차원의 전국단위의 추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2. '의문의죽음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 음 -

1)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제 성격의 특별위원회 설치.

2)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3) 의문의 죽음 사건 중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가 공권력이 살해 한 경우로 본다.

- 이 상 -

청원자 대표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350-11번지 16/3
(전화: 0371-42-8140)

.....

성 명 : 이 창 복 (인) 외 52,898 인 (1차 취합분)

- 첨부자료 3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약칭 열사범추위)

국회 특별위원 명단 (1차분)

<국민회의>

김근태 김민석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원길 김종배 김충조 김홍일 노무현 박광태 박상규
방용석 설 훈 신기남 유선호 유재건 이기문 이길재 이상수 이석현 이성재 이영일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한용 정호선 조성준 조세형 조순승 조웅규 조한천 조홍규
천정배 한영애 한화갑

< 한나라당 >

강삼재 강현욱 권오을 권철현 김명윤 김문수 김수한 김영선 김홍신 박종웅 서 훈 안상수
이규정 이미경 이부영 이성호 이수인 이신범 이우재 이원복 이재오 정의화 제정구 황학수

<자민련>

김동주 이긍규

인권 자료실
등록일 | 문류기호 | 호
B12-5 | 62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약속을 환영하며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유가협 대표와 김대중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시키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7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속에서 산화해 간 수많은 혈육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 당한 42명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우리는 지난 20여년간의 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오늘도 서울역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하였던 부모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10월 20일 오늘 12시부터 약 1시간 반동안 있었던 김대중대통령과의 면담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문제와 그 후속조치로 열사·희생자 묘역 설치와 민족민주 열사 기념관 설립등의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대통령의 약속은 뒷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삶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회의 참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김대중대통령의 약속에 기뻐 할 수만은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혈육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가협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답변은 지금까지 지지부진되었던 개혁을 여는 시발점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정통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의미에 걸맞는 국민의 정부 되겠다는 약속이어야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의 모습에서 산 자의 살아갈 길을 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1998년 10월 20일

전 국 민 족 민 주 유 가 족 협 의 회

인권 자료실
분류번호 | 분류기호 | 문서번호
B12-5 | 6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우110-542 종로구 창신2동 651-30 한울삶(전화 764-1684, 전송 743-2835)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시행일 : 1998. 11. 3
제목 : 취재 및 보도 협조 요청
담당자 : 김학철(742-3180), 손종필(764-1684)

- 보도 자료 -

유가협,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농성 돌입.

1. 언론 정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유가협 회원들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법 제정 촉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오니 귀사에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

농성 돌입 일시 : 11월 4일 14시
(농성 돌입식을 한 뒤 국민회의 앞에서 법 제정 촉구대회 진행)
농성 장소 : 국회 앞(한나라 당사 앞 마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회장 배은심)는 11월 3일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제13차 정기 총회에서 자식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올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법 제정시까지 무기한 농성을 국회 앞에서 전개하기로 결의 하였다.

유가협은 가족들을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잃고 난 뒤 그 뒤를 이어 길게는 30년 가까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88년에는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137일 동안 농성을하여 국회 5공특위 때 그 진상이 밝혀지는 듯 하였으나 3당 합당으로 인해 좌초된 바 있다. 유가협은 그 이후에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의장 이창복)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해 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8월 3일에는 국회의원 65명(이길재, 이미경, 조세형 등)이 참여하고 32개 단체가 모인 열사범추위(공동의장 이창복 등)를 결성하였다.

9월 15일에는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 58명을 소개의원으로 하고 52,898명의 국민서명을 첨부하여 국회에 청원한 바 있으며 현재 여당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하여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로 유가협 회장단과 열사범추위 의장단을 초청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정부와 여당에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이상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살아 온 세월이 얼마 였던가.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어 간 뒤, 우리는 독재 정권과 주변의 눈총을 받이 가면서도 오로지 목숨을 바쳐야만 했던 그 엄원이 옳았다는 신념으로, 지금껏 이는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살아 왔다.

목숨을 잃은 가족들에게 독재 정권이 씌워 놓은 범법자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가 살해하고 나서 자살로 은폐시킨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 간 가족들의 뜻을 깨닫고 자랑자게 민족민주운동을 해 나가는 투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5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지내 왔다.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유가협 회원들이 하나, 둘 세상을 하직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억울함과 분통한 심정으로 피울음을 삼켜야만 했다.

이제 우리는 그 통한의 세월 동안 싸워 왔던 '명예회복,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마지막 힘을 모아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입한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병들어 몸 한 군데 성한 곳 없는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 앉는 이유는,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이를 반드시 이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한 여름의 뙤약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집중 호우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목이 쉬도록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외쳐 대었다.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서명하였고, 대통령도 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 앞에 두 번 죄인이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법 제정이 될 때까지 국회 앞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시는 우리와 같은 부모들이 이 땅에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998년 11월 4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일동